

투데이 칼럼

지방분권형 개헌 왜 절박한가

국회 헌법개정특별위원회(개헌특위)가 87년 개헌 후 30년 만에 활동 중이다. 개헌이 기본권 의미 확장을 통한 기본권 강화와 정부형태 및 선거구제 개편을 통한 권력 구조의 틀을 바꾸는 쪽으로 진행되고 있다.

개헌이 쉽지 않음을 고려 이창에 시대의 변화에 맞지 않는 부분은 크게 손보고 부족한 내용은 메꿔야 한다. 이긴 자는 살고 진 자는 죽는 승자독식의 사회구조와 수도권은 살고 지방은 죽는 지역 불균형의 틀을 깨야 한다. 그래서 함께 잘 사는 살관나는 나라로 새판을 짜야 한다.

국회의장실이 60주년 제헌절을 맞아 개헌에 대해 여론조사를 했다. 그 결과 국민 10명 중 8명꼴로 대통령의 권한 분산과 지방정부의 권한 강화에 찬성하고 있다. 응답자 79.6%는 중앙정부의 권한과 재원을 지방자치단체로 나눠야 한다고 한다. 위 숫자는 지금 전국 지방자치단체들이 처한 현실이 중앙 패권에서 실질적인 지역자치로 틀을 바꾸는 분권형 개헌의 절박성을 통감하게 한다.

한국 고용정보연구원이 지난해 발표한 '한국의 지방 소멸에 관한 7가지 분석' 자료에 의하면 향후 30년 이내에 전국 243개 지자체 중 77곳이 사라질 위기에 있다. 전북도 전주, 군산, 익산, 완주를 제외한 모든 시군이 마찬가지다. 자료는 가입여성 인구(20~39세) 비중 대 고령인구(65세 이상)의 비중이 0.5 이하는

소멸 위험지역으로 분류하고 있다. 임실이 0.25, 고창이 0.28 초형면이나은 정읍도 0.43으로 위험지역에 포함된다.

이런 위기는 지방 혁신도시와 세종시 같은 행정중심 복합도시를 조성 그러나 지방분권화를 추진한 참여정부를 제외하곤 그동안 대부분 정부가 수도권 규제 완화를 통한 수도권 집중화와 도시화에 파묻힌 정책을 편 결과다.

지금도 농촌은 아이의 울음소리는 사라지고 어른들의 한숨 소리만 들려온다는 푸념처럼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으로 인구·경제력·사회문화적 집중은 이어지고 있다. 예컨대 1960년대 28만 명이던 정읍의 인구가 현재 12만 명으로 반 넘게 줄었지만 당시 10만 명쯤 이던 수원의 인구는 현재 12배가 늘어나 무려 120만 명에 이른다. 이는 대부분 지방자치단체가 처한 현실이다.

이처럼 농촌은 인구가 자연히 줄고 빠르게 빠져나가 스스로 살아갈 수 살아남을 터미지 위협받고 있다. 이것은 결국 사람이 적다는 뜻을 넘어 너무 적은 인구가 일정한 생

활 수준 유지가 어렵고 생산력이 떨어져 기초적인 공공서비스 제공조차도 힘든 위험에 처할 수 있다는 것을 뜻한다.

UN은 65세 이상 인구가 14% 이상이면 고령사회, 20% 이상이면 초고령 사회로 정의한다. 이 기준에 따르면 현재 우리나라 도시는 노령인구가 5% 내외지만 농촌 지자체 대부분 노령인구가 20%를 넘어 고령 사회에서 초고령 사회로 접어들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 광역 대도시 식 규모의 경제 틀로 나타난 이런 폐해는 수도권 또한 교통체증, 대기 오염 같은 도시환경의 악화와 주거비 등 생활비의 증가로 삶의 질이 떨어지는 문제로 이어지고 있다.

수도권 집중화로 지방과 수도권 모두에게 고통을 주는 지역의 양극화 문제를 풀어야 한다. 그래서 국가는 지역의 발전 정도와 특색에 맞게 차등적 분권을 통해 자율적 정책 결정권을 주고 예산의 규모도 다르게 지원해야 한다.

또한, 지방도 획일화된 산업에 국한은 대신 지역의 환경과 역사 문화적 특성을 고려 차별화된 사업을 찾아 지방자치의 취지에 맞게

다양성을 갖도록 해야 한다. 그래서 지역마다 교육, 문화, 보건, 복지, 생활, 환경 등 분야에서 정체성 있는 의제들을 찾아 발전시키고 질 좋은 일자리를 만들어 사람이 살기 좋은 매력적인 곳으로 만들어야 한다.

국가는 지역의 인구가 빠르게 주는 것을 고려 생활권이 비슷한 광역행정권으로 이웃 시군을 묶어 환경 및 역사자원, 문화, 기술 등의 공동 활용과 예산의 공동 투자를 이끌어야 한다.

그래서 환경보전과 함께 복합적인 경제를 키워 주민들의 삶의 질을 높이는 종합적인 지역발전을 꾀해야 한다.

예컨대 정읍시가 이웃한 고창, 부안, 김제와 함께 운영하는 감쪽면의 서남권 광역 화장장 같은 것은 좋은 예라 할 수 있다. 수도권과 지방의 지역적 양극화가 사회적 양극화를 만들고 있다. 국가는 이창에 국토균형발전 개헌으로 농촌 사람들이 상대적으로 박탈감과 소외감이 없도록 해야 한다.

지방분권을 앞당기고 인구가 수도권에 집중되는 것을 막아 지방에도 고르게 나누는 지방분권형 개헌이 될 수 있도록 주민들의 적극적인 관심과 참여가 필요하다.

민생정치와 생활정치의 무대는 지역이고 주인공은 주민이다. 중앙정부의 권한을 과감하게 지방 자치단체에 넘겨주는 지방분권형 개헌을 통해 지방인구를 늘려 수도권과 지방이 함께 잘 사는 사회 통합의 문을 활짝 열길 바란다.

독자제언

'사회적 약자 보호'를 위한 치안정책 실시

문재인 정부의 100대 국정과제 중 하나인 '민생 치안 확립 및 사회적 약자 보호'의 일환으로 경찰은 '사회적 약자 보호 3대 치안정책'을 마련하고 시행에 들어갔다.

3대 치안정책이란 ▲젠더폭력(성폭력·가정폭력·여성 대상 보복폭력) 근절 ▲이동·노인학대 근절 및 실종 예방 ▲학교폭력 및 학교(가정) 밖 위기 청소년 보호를 말한다.

특히 3대 치안 정책 중 '젠더폭력'의 피해자다 대부분이 여성인 점을 고려해 '여성폭력 근절 100일 계획'을 추진한다. 내달 8월 31일까지 '데이트폭

력 집중신고기간'을 운영해 피해자 또는 주변인의 적극적인 신고를 독려해 데이트폭력 범죄 행위를 집중 단속할 계획이며, 전문상담장비를 활용해 피서지를 중심으로 '성범죄 및 불법범죄' 집중단속을 펼친다. 또한 청소년 일탈이 일어나기 쉬운 여름방학철을 맞아 8월 25일까지 가솔 청소년 성매매 차단할 수 있도록 단속을 강화한다. 이와 함께 추석 등 명절기간 가정폭력이 증가하는 점을 고려해 9월부터 10월 말까지 가정폭력 위기가정을 일제 모니터링 하기로 했다.

박주현 정읍경찰서 상동지구대 순경

전주매일 전자신문 www.jjmaeil.com

독자제언

여름철 피서지 성범죄 예방법

성범죄란 성에 관계되는 범죄이며 자신의 의사와 동의 없이 가해지는 신체적, 정신적, 언어적 폭력 등 일체의 행위를 함으로써 성립되는 범죄를 말한다. 여성 피해자가 대부분이며 신고를 해야만 범죄가 성립되며 건전한 성 풍속을 보호하기 위한 것이다.

잠마침이 끝나면 본격적인 휴가철을 맞아 많은 분들이 북적이는 계곡이나 강, 바다에서 물놀이를 즐길 것인데 무심코 신체적 접촉이 일어날 수 있을 것이다.

하지만 실수가 아닌 우연을 가정하여 이성의 특정한 신체부위를 접촉하는 경우도 있을 수 있고 이성이 효의를 보이며 합석 등을 요구하고 이에 응하면 술과 약물 등으로 항거 불능

의 상태로 만든 뒤 성범죄를 저지할 수도 있어서 휴가철을 앞두고 우려가 되고 있다.

상처를 받거나 불쾌하지 않게 휴가를 잘 보내고 돌아오려면 스스로 예방수칙을 인지해야 할 것이다. 휴가지에서 낯선 사람이 권하는 술이나 음료를 음식은 거절해야 하며 심야에 이어폰을 꽂고 홀로 배회하는 것은 삼가고 길을 걷다 낯선 사람이 수상한 사람이 따라오면 상황을 따라 주위 도움을 요청해야 하며 호의적으로 동승을 권하는 차량은 타지 말고 피서지에서 들뜬 분위기에 휩싸여 마음까지 느슨해져서 위험 인식이 무뎠다는 일은 없어야 한다.

박재원 전북경찰청 경철관기동대 순경

사설

지금도 전북 발전을 힘차게 도모해야 할 때

지금도 전북 발전을 힘차게 도모할 절호의 때이다. 새정부의 미래 발전을 위해 많은 구상과 방편을 내놓고 있는 지금, 다 함께 지역 발전 공동관심사를 키워야 한다는 이야기다. 그러려면 우선 한 마음 한 뜻을 가져야 한다. 지금 미래 발전을 위해 절호의 시기인 데도 정치적 안목이 달라서 인지 다를 관심이 흩어져 있다.전북의 발전을 위해서 많이 아쉬운 일이다. 무슨 일이 있어도 가장 중요한 관심사를 함토 발전에 두어야 한다. 도민의 오랜 바람은 그 언제나 지역 발전이기 때문이다.

혁신도시에 대한 발전 관심사의 면면을 보면 그 내용이 다양하다. 5대 스마트 농생명 벨트 조성을 언급하는 가운데 농생명산업 도시로 키우겠다는 이야기도 있고, 금융산업도시로 키우자는 이야기도 있다. 기금운용본부의 안정적인 정착을 약속하는 소리도 있고, 특화산업과 4차 산업을 연계하여 발전시키겠다는 목소리도 있다. 전북 발전을 위한 지역 전략으로 혁신도시의 발전은 시기 적절한 선택이 아닐 수 없기 때문이다.

그 대체로운 형용의 희망들이 나중에 공중에 뜬 신기루가 되게 해선 안된다. 여기 담담한 말을 또 반복하거나 전북도는 제 몫을 챙기기를 확실해 해주어야 한다. 그리고 지역 현안을 구체적으로 추진하기 위해서는 누구나 공동 보조의 정신이 필요하다. 같은 마음을 가져야 한다고 매번 주문했던 것은 그래서이다. 지역을 보다 발전시키기 위해서는 어디에 소속돼 있던 우리 지역의 몫을 온전히 챙기는데 힘을 보태야 한다. 새만큼 속도전이 바로 그러하고, 군산조선소 재가동 문제가 그러하고, 청년 일자리 창출 작업이 그러하다.

예전에는 전북보다 못했던 지자체들이 앞서 나가고 있기에 하는 말이다. 다른 광역 지자체 지역은 거주 인구가 늘어나고 있어 있는데 이쪽은 담보 상대 내지는 퇴보 상태다. 전북도는 보통 이상의 열정을 가지고 지역 발전 프로젝트를 정부에 삼가시키고 또 말해야 한다. 지역 발전 약속을 받아들일 절호의 기회인 이때, 전북도는 제 역량을 한껏 발휘해 주기 바란다.

지금도 행방이 묘연한 장밋빛 프로젝트

전북 발전을 약속하며 탄생했던 장밋빛 프로젝트들에 생각해 볼 때이다. 그 프로젝트 사업들이 어찌 이상하게 됐으니 하는 말이다. 지금은 그 행방이 묘연한 까닭이다. 청사진 그리기와 나팔 불기가 요란했는데 그뿐이라면 곤란하다. 지금 문재인 정부가 들어선지 3개월이 되고 있는 지금, 지난날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의 프로젝트 발굴 작업들이 다시 생각나는 것은 그래서이다. 그 프로젝트 사업들이 현 정부의 정책 방향과 조화를 이루며 추진했으면 싶은데 말이다.

지금 무기력한 모습을 보여주고 있는 전북도에 하고 싶은 말은 분명하다. 사업을 발굴했으면 추진 쪽으로 가닥을 잡아야 한다. 그게 없으면 말장 도로목이다. 물론 이같은 불만의 소리는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의 사업 발굴을 책잡고 해서가 결코 아니다. 사업들을 발굴하지 않고서는 발전을 도모할 수 없음을 누구나 잘 알고 있다. 문제는 그 사업들이 오랜 시간이 지나도록 구체적인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고 있는 것에 있다. 무슨 말이나면 관계자들의 추진력이 약하다는 지적이다.

사업들을 발굴했으면 힘을 실어서 계속 밀어붙여야 하는데 그게 없는 것이다.

물론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 이 큰 사업들을 발굴한 것에 의미가 없는 것은 아니다. 프로젝트 사업 발굴은 지역 발전을 위한 희망과 기대가 아닐 수 없다. 그러나 사업 발굴 그 자체에만 의미를 부여해서는 안 된다. 전북도와 전북발전연구원은 잘 판단해야 한다. 특히 전북도의 경우 더욱 그래야 한다. 지역 발전을 위해서는 사업을 추진하는 쪽으로 전환시켜야만 한다. 그러므로 전북도에 하고 싶은 말은 간단히 요약된다. 중요한 것은 장밋빛 프로젝트가 아니다. 도민들이 바라는 바 중요한 것은 프로젝트의 추진과 그에 따른 일자리 창출이다.도민들은 우리 전북지역이 그렇게 발전 수순을 밟아가기를 고대하고 있다.일자리가 많이 창출되고 고용도 안정되기를 도민들은 늘 바라고 있는 것이다. 그러므로 전북도와 브레인들은 분발해야 한다. 청사진 그리기보다도 더 중요한 것은 그 프로젝트 사업들을 구체적으로 추진하는 행동임을 명심해 달라는 것이다.

용기와 희망을 주는 인간을 위한 정론지

"더 좋은 신문, 더 사랑 받는 신문, 독자와 함께하는 신문"을 위해 전주매일의 전 직원들은 '전북 최고의 신문'을 제작하기 위해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진정한 지방자치 발전을 위해 중앙지를 답습하는 형태를 벗어나 보다 깊이 있게 내 고장 소식을 빠르고 정확히 독자 여러분들에게 전달하겠습니다.

당신의 가려움을 속 시원하게 긁어 드리기 위해 대안적 비판 기능을 강화하고 있으며 한 단계 더 성숙한 네트워크 구축과 함께 지역발전의 수레바퀴를 힘차게 굴리겠다는 약속을 드립니다.

Large graphic illustration of a sailboat on the water with a sun in the background, serving as a background for the masthead and slogan.